



## 국민기본소득제란?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업주부부터 직장인까지, 거주지역과 소득수준과 취업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2021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기본소득제를 제안합니다.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1) 세제를 투명하게 고치고 (2) 탈루된 세금을 걷고 불필요하게 묶어둔 정부예산을 활용하고 (3) 기존의 복잡한 복지체계를 단순화해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빈곤을 없애는 국민기본소득

2019년 8월 13일,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42세 엄마와 6세 아들이 굶주림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연초 1만 4000원이던 통장 잔고는 5월 0원이 되어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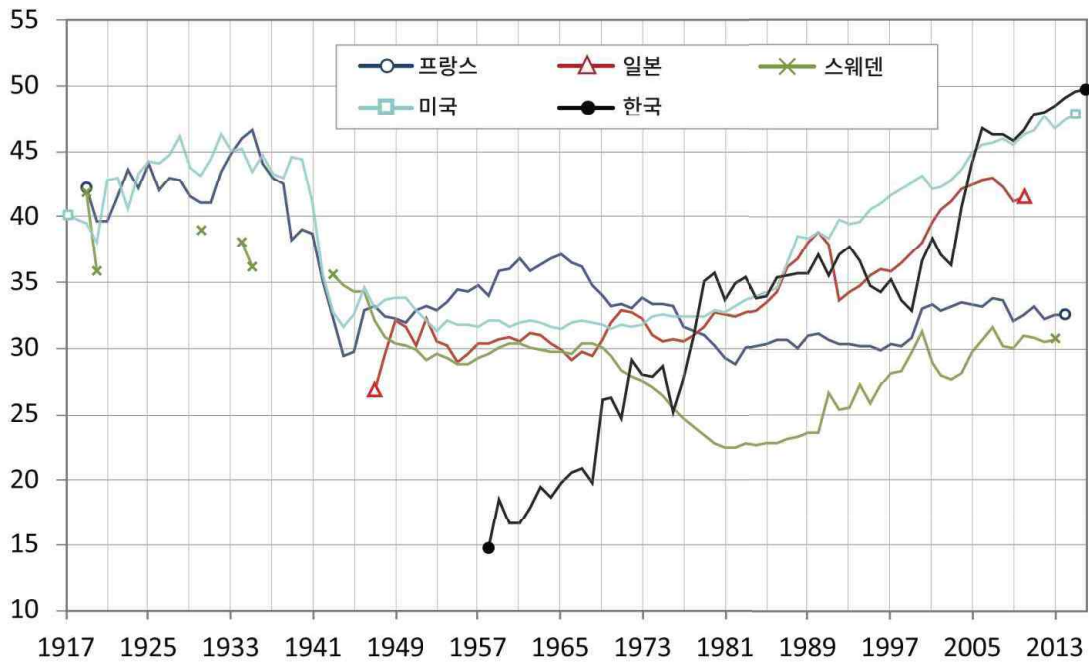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이 없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 급여도 있고, 아동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자에게는 그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생계급여는 까다롭게 선별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생계 급여를 받

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벌이가 생겨 2013년 끊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다시 신청했지만, 부양해줄 남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외국에 나가서 찾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엄마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외의 다양한 복지제도는 너무 복잡해 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표1. 소득 상위 10%가 전체에서 가져가는 소득 몫은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조건없이 미리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이 가족은 극단적 비극을 맞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별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지 묻지 않고 1인당 30만원만 지급했다라도 이 가족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 1에서 보듯이, 소득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이 절반도 넘습니다.

불평등도가 큰 사회에서는, 고소득층이라도 자칫 실수하면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저소득층은 노력해서 위로 올라갈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고소득층은 불안하고 저소득층은 좌절합니다.

그러나 불평등도가 작은 사회에서는, 고소득층은 떨어지더라도 타격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저소득층은 조금만 노력해도 한두 계단 올라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고소득층은 안정감을, 저소득층은 희망을 갖습니다.

국민기본소득제가 절대빈곤을 완전히 없애고 불평등을 줄여 모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현재 0.32인데, 월 30만원의 국민기본소득을 지급하면 0.23으로 푹 떨어져 불평등이 낮아졌습니다.

## 경제에 활력을 주는 국민기본소득

한국의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27개국 중 22위입니다 게다가 미래가 불안하니 주머니를 조입니다. 가계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15년 보고서에서 소득 증가율을 소비 증가율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계소비 부진을 지적했습니다.

가계소비 부진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저축은 미덕이 아닙니다. 돈이 풀리지 않아 경제가 돌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 구조가 이어집니다. 그나마 미중 무역전쟁 탓에 수출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때 내수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소득층에 평생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축할 필요가 없을 때 사람들은 주머니를 엽니다.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주머니를 더 크게 엽니다.

평생 동안 보장되는 국민기본소득제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열 것입니다. 소비성향이 높아진 사람들은 소비를 늘려 도매·소매, 음식·숙박업 등 내수 부문에 널리 퍼져 있는 자영업자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입니다.

또한 국민기본소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도 혁신가들이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혁신에 대한 연구들은 혁신가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삶의 안정성을 꼽습니다. 표 2에서 보듯이, 어릴 때 똑같이 수학성적이 좋았어도 경제적 상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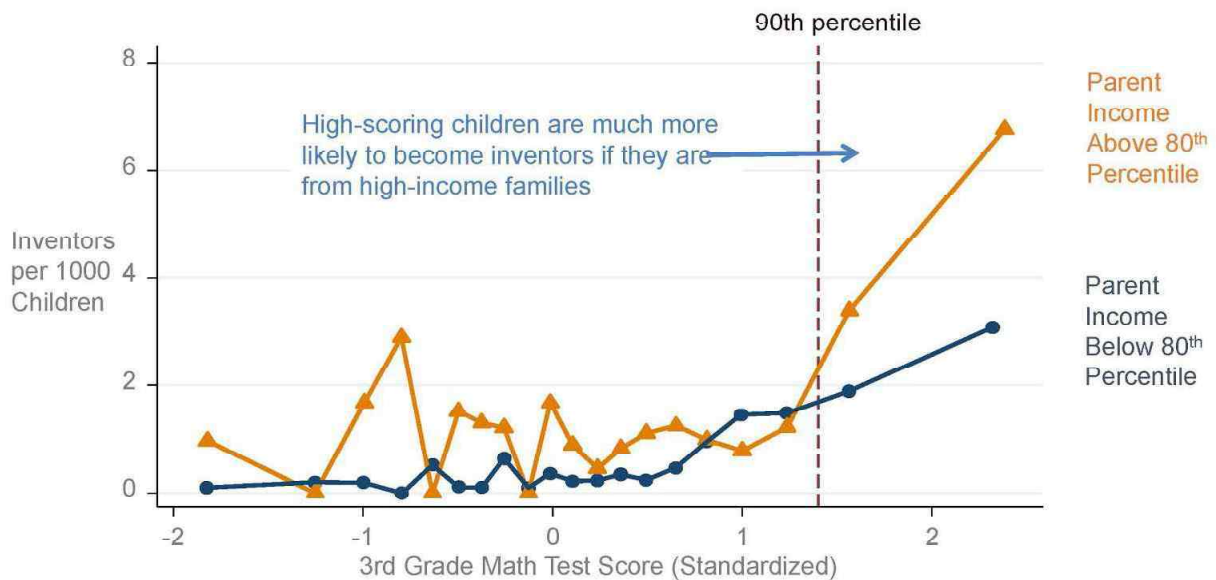
좋았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성인이 되어서 혁신가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면, 나라 전체적으로 혁신가가 늘어날 것입니다. 실패해도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면 청년들이 실험하고 창업에 나서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평생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적성을 포기하고 공무원시험에 나서는 청년은 훨씬 줄어들고, 혁신적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국민기본소득제는 이렇게 경제 활력을 키울 것입니다.

표2. 부모 소득수준이 높으면 학생 수학성적이 같았더라도 나중에 혁신가가 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주황색: 부모 소득 상위 20%, 파란색: 부모 소득 하위 80%)  
(자료: Lost Einsteins: Innovation and Opportunity in America)

### Patent Rates vs. 3rd Grade Math Test Scores



## 공정한 과세로 만드는 국민기본소득

국민기본소득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정한 과세입니다. 이를 통해 8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과세의 핵심은 소득세에 존재하는 모든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자일수록 연말정산으로 세금 감면을 많이 받게 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적이기 때문에,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고,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도 많이 받게 됩니다. 감면을 없애 마련한 재원을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면, 자연스럽게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기본소득 제도가 됩니다. 감면이 워낙 많아서, 이를 모두 없애면 소득세율을 3%포인트나 낮추면서도 56조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소득 자체를 근로소득처럼 종합소득의 일부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면, 15조 원 가량이 추가로 걷힙니다. 이 역시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탈루 및 비과세 소득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면 재원이 더 확보됩니다. 영국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는 2012년 조세도피처로 흘러들어간 한국인의 금융자산이 7790억 달러(934조원) 규모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 등 소득임이 명확하나 과세하지 못하는 소득도 상당 규모입니다. 이런 소득에도 유리처럼 투명하게 과세하는 월급장이의 근로소득처럼 공정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일부만 과세해

도 2021년 기준으로 11조 6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복지를 단순화해 만드는 국민기본소득

둘째, 복지급여를 통합하고 단순화해 약 50조원을 마련합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소득보전 제도를 정비하면 50조원을 더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보전제도는 너무나 복잡하고 불투명해서,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활동촉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초연금 등 이름도 다르고 담당 관공서도 다른 수백 수천개의 제도가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기본소득으로 통합하면서 상당 금액을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연말마다 불필요한 보도블럭에 나갈 돈으로 만드는 국민 기본소득

셋째,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약 54조원을 마련합니다. 우리의 세금은 기금 및 특별회계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기관의 예금통장에 쪼개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쓰지 못해 남아 있는 예산도 수두룩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동네마다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고 보도블럭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남아도는 예산을



써버리기 위해 건설회사로 넘기는 일입니다. 그나마도 다 쓰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인 돈이 수십조원에 이릅니다. 이런 돈을 국민기본소득으로 직접 돌려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187조 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187조 원은 큰 돈이지만, 이렇게 근본적으로 재정 구조를 개혁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액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두는 즉시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과정이 매우 단순하고 행정 비용이나 왜곡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매달 연말정산을 하면서 일정액을 받아가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 3. 월 30만 원 기본소득 지급(2021년 기준) 자원  
(자료:LAB2050, 단위: 조원)

자원마련방안		금액
공정한 과세 약 83조원	소득세제 비과세·감면 정비 (명목세율 3%p인하)	56.2
	기본소득 과세	15.1
	탈루 및 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	11.6
투명한 복지 약 50조원	일부 복지정책 폐지 및 축소	31.9
	소득보전 성격의 비과세·감면 정비	18.3
효율적 재정 약 54조원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8
	지방재정 지출 조정	6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	15
	재정증가분의 일부를 활용	9
	지방정부 세계잉여금을 활용	16
합 계		187.1
국민기본소득제 필요자원		187

## 대한민국 100년의 꿈을 국민기본소득으로

국민기본소득제는 첫째,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둘째, 경제에 활력을 주며 한국사회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국민기본소득제는 인생을 살아가며 '소득이 높을 때 더 내고 낮을 때 더 받는' 안전망이 됩니다. 또한 아동에 대해서도 지금해 저출생 시대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입니다.

월 30만 원은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당 GDP의 약 10퍼센트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3인 가구라면 월 90만 원, 4인 가구라면 월 120만 원의 조건 없는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게다가 가구를 이루지 않고 있더라도 노부모나 친척 친지에게 모두 이 금액의 소득이 추가로 생긴다고 생각하면 이는 현실에서는 꽤 큰 금액입니다.

황당한 상상 같으신가요? 100년전만 해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가 되고,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황당한 상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며 민주정을 선포하고 대통령을 선출했을 때, 다들 소꿉장난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40년전까지도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한다는 생각은 누구도 현실적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필요하고 정당한 것은 반드시 가능하게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 3조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남녀, 귀천, 빈

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균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100년전 대한민국의 꿈을, 오늘 국민기본소득제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